

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

등록번호	2014-6	담당부서 작성자	부패방지국 / 공익보호지원과 오병철 / 044-200-7775
정 책 명	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		
사업개요	□ 추진배경 ○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의 보상금 제도가 전문신고자(파파라치)의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 발생 ○ 영세 서민들의 피해방지 및 보상금 지급 제한 대책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·보완 □ 추진기간 : 2014.3.24. ~ 2014.10.31. □ 주요내용 ○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하한 금액의 상향 조정(10만원 ⇒ 20만원 초과액) ○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(10건) 및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 구체화 등을 위한 '공익신고 보상금 고시' 제정 근거 마련		
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	□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 ○ '13.10.28. : 13년도 위원회 국정감사 시 지적(안덕수, 강기정 의원) ○ '14.1.13.~2.13. : 조원진 의원(1.13.), 조해진 의원(2.13.)의 전문신고자 보상금 지급제한 방안 검토 요청 ○ '14.2.19. :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건의 - 이보람 전문위원('14. 9.24.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제개선 과제 16번) ○ '14. 3.10. : 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제도개선 건의 - 조준호 전문위원('14.7.17. 제4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손톱밑 가시 개선과제 2-25번, '14.8.25.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07번 과제) ○ '14.3.24.~7.25. :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안 부처 협의, 입법예고, 규제사전심사, 법제심사 완료 ○ '14.8.21.~9.2. : 차관회의(8.21.) 및 국무회의(8.26.) 상정, 대통령 공포·시행(9.2.) □ '공익신고 보상금 고시' 제정 ○ '14.9.2.~10.31. :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 건수(10건) 및 보상금 지급제한·감액 사유 구체화 등을 위한 '고시' 제정안 규제사전심사, 관계기관 의견조회, 행정예고(9.2.~10.7.), 위원회 결정(10.27.), 관보 고시(10.31.)		